

더불어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 **보도자료**

| 본부장 윤후덕·인태연 | 수석부본부장 민병덕·박용갑

|      |                                                                         |      |       |
|------|-------------------------------------------------------------------------|------|-------|
| 보도일시 | 25.05.27.(화)                                                            | 배포일시 | 즉시 배포 |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원국 / 02-6788-3201, 3631<br>담당자 : 장정옥 선임비서관 / 010-6788-5732 |      |       |

## “절망의 빛에서 희망의 빛으로” ...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주거본부 산하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코로나 시기 부채 일부탕감 및 채무조정 정책제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민생살리기본부 산하 금융주거본부 금융위원회가 정책제안을 통해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 행사를 열고,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제안은 코로나 시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부채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조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정책제안을 받은 민생살리기본부는 선대위 정책본부에 전달하고 새정부에서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을 비롯해 민병덕 수석부본부장, 김경배 총괄부본부장, 금융주거본부 이현욱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실행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었다. 이들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에 의존해 왔고, 실제로 약 365만 건의 대출이 공급됐다.

하지만 이후 금리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특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 등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라 왔다.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다.

## **두 가지 선택형 지원안 … “성실함에도 보상이 필요하다.”**

제안된 정책은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재기지원형: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10년 유예**

재기지원형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한 구조조정형 지원책이다. 모든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은 10년 동안 무이자로 유예한 뒤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신용도 하락 없이 회생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② 성실상환보상형: 원금 50% 즉시 탕감(최대 5천만 원)**

코로나 시기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마련됐다. 남은 원금의 절반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즉시 탕감하고 상환완료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형평성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 **특별법 제정과 협의체 구성 등 제도화 로드맵도 제시**

정책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에 금융주거본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욱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피해 책임을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빛의 구렁텅이로 떠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의 신용을 살리고, 경제 기반을 복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는 길” 라고 말했다.

## **이재명 후보 ‘배드뱅크’ 제안의 구체화**

이번 정책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코로나 배드뱅크’ 설립 구상과 결을 같이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 자체는 불가피한 재난이었으나,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국가책임 원칙 아래 보상되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당 기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자영업자는 음식점, 카페, 노래방,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특정되며, 이번 정책안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제는 책임의 시간… 희생과 공정이 함께 가야”**

인태연 공동본부장은 “국민 생명 보호라는 대의 아래 시행된 방역 조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며 “그 희생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수석부분부장은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모두가 겪은 피해를 넘어 ‘집합금지’ 라는 행정명령으로 생계를 멈춰야 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 공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으로 채워졌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욱 위원장은 “코로나 시기 해외 주요국은 직접 지원 비중이 컸던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대출 등 간접 금융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며, 이 결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고 생계가 무너졌다. “재정 한계를 감안해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탕감·유예안을 설계하고, 코로나 채무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주거본부 금융위원회**